

노인부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Analysis on The Influence Factors of Elderly Care Perception

박찬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Chan-Hui Park(chpark1415@gmail.com)

요약

현재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 중 노인부양문제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의 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여년새 크게 변화되었고, 인식의 변화가 크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의의도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11차)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운영 및 전달 측면에서 그리고 재정부담 측면에서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가선택집단과 가족선택집단으로 구분하여 노인부양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서비스를 경험할수록, 공적연금을 수급할수록, 노인부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노인분야지출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할수록,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노인부양문제 해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노인복지서비스 | 노인부양 | 노인부양인식 |

Abstract

Korea is entering into an “Aging Society” rapidly. In this currency, the Elderly Supporting Problems is emerging as a main issue of elderly welfare services policy. The study is based on the welfare panel data of 2016 (11th), and it is divided into the national selection group and the family selection group who are in charge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n terms of operation and delivery and financial burden.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effect.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higher the age of the elderly, the higher the age and education level, The more we experience welfare services, the more we receive public pensions, the greater the responsibility of the elderly, the greater the elderly spending. It is meaningful to provide basic data for solving the elderly supporting problem at the present time which is not sufficient for the elderly welfare system.

■ keyword : | Social Welfare Service for Elderly | Elderly Care | Elderly Care Perceptoin |

I. 서론

현재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 속도는 위협적이다.

이미 2016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으며, 세계인구전

접수일자 : 2019년 01월 29일

수정일자 : 2019년 02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2월 25일

교신저자 : 박찬희, e-mail : chpark1415@gmail.com

망 보고서¹에도 '2095년 한국은 세계최장수국이 될 것이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1].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국의 연령구조는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2012년 73.1%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60년에는 49.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출생아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전국적으로 중위연령²이 높아져, 2015년 40.9세에서 2045년 54.6세로 향후 30년간 13.8세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우리의 문제는 고령화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고, 시행착오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기 힘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예방하여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 중 노인부양문제 그중에서도 노인부양인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인부양인식은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자녀가 부모부양에 대해 계획하고, 국가가 관련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노인부양인식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며,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인식을 변화시킨다.

저 출산·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크게 늘어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수인 노년부양비는 2018년 현재 19.6명에서 2060년에는 82.6명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복지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노인부양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노인부양부담 및 갈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아직까지 부양부담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정립은 되어있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노인부양부담의 개념은 부양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애로이며, 원인은 사회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 등을 들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인부양부담에 대한 연구는 치매나 중풍 등 만성질환이나 중증장애를 가진 노인이나² 경제적으로 생활을 이끌어 갈수 없는 노인에 대한 부양에 한정되었거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고부간 갈등 가족갈등 등 가족관계에 맞춰진 경향이 강하다³[4].

또한 부양의식 또는 가치관에 관심 갖는 연구⁵와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수급, 복지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부양인식과 연결시킨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인생활실태조사 활용하여 노인부양인식에 대한 10년간 변화를 분석한 연구⁶는 가치관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만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고, 인식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 김영범은 노인부양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⁷. 석재은⁸은 세대별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달리하는 영향요인을 다루었지만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정책 도입된 후 인식 변화요인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인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여년 새 크게 변화되었다.

2017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는 노인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7.3%였지만, 2016년에는 32.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부모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⁹.

그동안 가족이 해왔던 역할을 점점 더 정부와 사회에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급격한 인식의 변화에선 무엇이 변화도록 만들었는지, 어떤 요인이 관련되어 있는지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노인부양인식이 변화하면, 정부에 변화된 인식을 요구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1 「2012 세계인구전망 보고서」. 유엔 경제사회국(DESA)

2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한다. 연령특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생산가능인구전망과 함께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현상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

마련해야 한다. 인식은 사람들의 실제행동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부양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부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노인부양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3년마다 실시되는 부가설문 조사 중 하나인 「복지인식조사(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 '운영 및 전달주체'와 노인복지서비스 '재정부담주체'라는 두 변수를 조합하여 '노인부양책임주체' 변수를 구성한 후 국가를 선택한 집단과 가족(본인포함)을 선택한 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세 이상으로 2016년도 조사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운영 및 전달주체'와 노인복지서비스 '재정부담주체'에 둘 다 응답한 경우로 국가선택 집단 2175명, 가족선택 집단 400명으로 총 25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분석에 이용된 주요변수에 대한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운영 및 전달주체와 재정부담주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영향력의 정도는 승산비(odds ratio)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2. 변수구성 및 측정

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인복지서비스 '운영 및 전달주체'와 노인복지서비스 '재정부담주체'라는 두 변수를

조합하여 '노인부양책임주체' 변수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종속변수의 조합으로 사용된 복지서비스 운영 및 전달주체에 대해서는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조사의 문항 중 노인분야의 경우 복지서비스 운영 및 전달주체를 묻는 질문 문항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는 복지서비스 재정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조사의 문항 중 노인분야의 경우 복지서비스 재정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 문항을 사용하여 재구성 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두 항목 모두 국가를 선택한 경우 '국가선택집단'과 두 항목 모두 가족을 선택한 '가족선택집단'으로 이루어진 이분 변수로 조작된 변수를 사용하였다³.

2.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한편 본 연구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로, '노인부양책임주체'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복지수급 요인으로 서비스 이용경험여부와 공적연금수급여부, 그리고 가치태도 요인으로 부모부양책임, 노인분야 정부지출의 4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먼저 서비스이용경험은 측정된 케이스가 많지 않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 직후에 조사된 2007년 복지인식조사 데이터와 2010년, 2013년, 2016년 조사된 데이터를 머지하여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모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재 코딩하여 투입하였다⁴. 공적연금수급여부⁵도 서비스이용경험여부와 같은 방법으로

3 두 변수 모두 국가와 가족 외에 직장, 민간기관, 비영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가족 범주 이외를 선택한 경우는 분석에 이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적은 케이스였으며, 또 국가와 가족을 선택한 경우를 비교를 하기 위해 타 범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서비스 이용경험은 2016년도 자료에서는 측정된 케이스가 적어 분석하기에 용이하지 않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재코딩하였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용경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주의의 자기이해적 관점(self-interest)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 번의 수급경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인식이나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들도 존재한다[10].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기간과 무관하게 수급경험은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13].

5 공적연금수급여부도 2007년부터 수급하고 있는 경우 2016년에도 수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수급여부도 2007년부터 2010년, 2013년, 2016년 조사에서 누락된 경우 재코딩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제코딩하여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부모부양책임은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① 매우동의 ~ ⑤ 매우반대로 코딩되어 있으며, 노인분야 정부역할은 ‘노인생활지원을 위한 정부지출이 어떠해야 하는가’ 질문에 ① 훨씬 덜 지출 ~ ⑤ 훨씬 더 많이 지출로 역코딩하여 투입하였다.

그 외 성별과 연령, 교육, 소득(경상소득)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통제변수로 밝혀진 변수들이다. 연령은 만 연령이고, 교육은 ① 무학(만7세이상) ~ ⑦ 대학원(석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소득은 경상소득을 가구균등화소득으로 환산하고, 로그를 취한 로그균등화소득으로 측정하였다.

표 1. 주요 변수를 조작정의 및 측정

변수		조작정의 및 측정
종속 변수	노인부양 책임주체	① 가족 ① 국가
독립 변수	복지수급	2007년~2016년까지 다음 12개 복지서비스 중 1개 이상 이용한 경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간병서비스, 이동편의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공적연금수급여부	① 없다 ① 있다
가치태도	부모부양 책임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는가 ① 매우동의 ~ ⑤ 매우반대
	노인분야 정부역할	노인생활지원을 위한 정부지출 ① 훨씬 덜 지출 ~ ⑤ 훨씬 더 많이 지출
통제 변수	성별	① 여성 ① 남성
	연령	만 연령 범주화 ① 20대 ~ ⑦ 80대 이상
	교육수준	① 무학(만7세이상) ~ ⑦ 대학원(석사)
	소득 (경상 소득)	년/만원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 ① 일반가구 ② 저소득가구

2.3 연구모형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노인부양책임주체’는 복지서비스 노인분야의 운영 및 전달주체와 재정부담주체를 모두 국가로 선택한 ‘국가선택집단’과 운영 및 전달주체와 재정부담주체를 모두 가족으로 선택한 ‘가족선택집단’으로 구분한 범주형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범주형 중

속변수와 설명변수간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개별 설명변수의 유의한 효과는 승산비를 통해 검증된다.

이 연구에서 승산은 가족을 선택한 집단(1-π(x_i))에 대한 국가를 선택한 집단의 비율(π(x_i))을 의미하며, 선형식은 다음과 같다.

$$\log \frac{\pi(x_i)}{1-\pi(x_i)} = \beta_0 + \beta_1X_1 + \beta_2X_2 + \dots + \beta_nX_n$$

그리고 인구사회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복지수급(복지서비스 경험여부, 공적연금수급여부)와 가치태도(부모부양 책임, 노인분야 정부지출)이 ‘노인부양책임주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결과

1. 기초분석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가 41.0%, 여자가 59.0%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고, 연령의 경우, 70대가 24.3%, 40대와 60대가 17.7%, 50대가 16.1% 순이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26.5%, 초등학교 졸업이 24.3%, 대학교 졸업이 15.0%, 중학교 졸업이 13.6% 순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을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의 경우 일반가구가 65.0%, 저소득층 가구가 35.0%로 일반가구가 더 많았다. 일반적 특성 중 ‘노인부양책임주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연령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일반적 특성과 노인부양책임주체에 따른 차이 (n=2575)

변수		가족(%)	국가 (%)	전체(%)	χ ² (p)
통제 변수	성별	남자 172 (43.0)	884 (40.6)	1056 (41.0)	.775 (.379)
	여자	228 (57.0)	1291 (59.4)	1519 (59.0)	

연령	20대	8 (2.0)	82 (3.8)	90 (3.5)	15,292 (.018)
	30대	28 (7.0)	219 (10.1)	247 (9.6)	
	40대	71 (17.8)	385 (17.7%)	456 (17.7)	
	50대	86 (21.5)	328 (15.1)	414 (16.1)	
	60대	71 (17.8)	384 (17.7)	455 (17.7)	
	70대	93 (23.3)	532 (24.5)	625 (24.3)	
	80대이상	43 (10.8)	245 (11.3)	288 (11.2)	
교육 수준	무학	40 (10.0)	215 (9.9)	255 (9.9)	7,552 (.273)
	초등학교	80 (20.0)	545 (25.1)	625 (24.3)	
	중학교	63 (15.8)	288 (13.2)	351 (13.6)	
	고등학교	114 (28.5)	568 (26.1)	682 (26.5)	
	전문대학	40 (10.0)	183 (8.4)	223 (8.7)	
	대학교	54 (13.5)	331 (15.2)	385 (15.0)	
	대학원 (석사)	9 (2.3)	45 (2.1)	54 (2.1)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	일반 가구	277 (69.3)	1397 (64.2)	1674 (65.0)	3,743 (.053)
	저소득 가구	123 (30.8)	778 (35.8)	901 (35.0)	

다음으로, 복지수급(서비스이용경험, 공적연금수급)과 가치태도(부모부양책임, 노인분야정부역할)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가 31.7%, 없는 경우가 68.3%였으며, 공적연금 수급한 경우가 28.7%, 수급하지 않는 경우가 71.3%로 나타났다. 부모부양책임이 자식에게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가 35.6%, 보통이 31.6%, 반대하는 경우가 32.7%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역할 중 노인생활지원지출에서 덜 지출해야 한다고 8.7%, 현재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49.7%, 더 지출해야 한다고 41.5%로 나타났다. 또한 4가지 변수 모두 '노인부양책임주체'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 독립변수와 노인부양책임주체에 따른 차이 (n=2575)

변수		가족 (%)	국가(%)	전체(%)	χ^2 (p)	
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44 (11.0)	772 (35.5)	816 (31.7)	93,642 (.000)	
	없음	356 (89.0)	1403 (64.5)	1759 (68.3)		
공적연금 수급 여부	있음	66 (16.5)	672 (30.9)	738 (28.7)	34,306 (.000)	
	없음	334 (83.5)	1502 (69.1)	1836 (71.3)		
독립 변수	부모 부양 책임	매우 동의	50 (12.5)	104 (4.8)	154 (6.0)	69,576 (.000)
		동의	153 (38.3)	610 (28.0)	763 (29.6)	
		보통	115 (28.8)	699 (32.1)	814 (31.6)	
		반대	74 (18.5)	715 (32.9)	789 (30.6)	
		매우 반대	8 (2.0)	47 (2.2)	55 (2.1)	
정부 역할 (노인 생활 지원 지출)	훨씬 덜 지출	8 (2.0)	23 (1.1)	31 (1.2)	60,098 (.000)	
	조금 덜 지출	64 (16.1)	130 (6.0)	194 (7.5)		
	현재수준으로 지출	199 (50.1)	1079 (49.6)	1278 (49.7)		
	좀 더 지출	109 (27.5)	779 (35.8)	888 (34.5)		
	훨씬 더 많이 지출	17 (4.3)	163 (7.5)	180 (7.0)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노인부양책임주체' 구분과 독립변수인 서비스경험 유무, 공적연금수급여부, 부모부양책임, 정부지출(노인 생활지원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log균등화소득)은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서비스경험유무와 공적연금수급여부는 성별, 연령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부양책임과 성별, 연령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지출(노인 생활지원지출)은 소득(log균등화소득)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노인부양책임주체'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A	B	C	D	E	F	G	H	I
A	1								
B	.191**	1							
C	.115**	.401**	1						
D	.152**	.035	.051**	1					
E	.125**	-.017	-.010	-.038	1				
F	-.017	.091**	.173**	-.064**	.014	1			
G	-.016	.154**	.179**	-.068**	-.022*	-.041*	1		
H	-.013	-.019	-.004	.095**	.011	.236**	-.677**	1	
I	-.029	-.004	-.036	.014	-.042*	.002	-.149**	.184**	1

*p<.05, **p<.01, ***p<.001 / 의사소통방식 일차: 1, 0으로 코딩하여 가변수 처리
 A=노인부양책임주체집단, B=서비스경험유무, C=공적연금, D=부모부양책임, E=정부지출노인, F=성별, G=연령, H=교육수준, I=경상소득

3. '노인부양책임주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노인부양책임주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수급 요인과 가치태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특성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부양책임주체'에 대하여 복지수급요인인 서비스경험유무와 공적연금수급여부와 가치태도요인인 부모부양책임과 노인분야 정부지출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에서도 연령과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먼저 복지수급 요인 중 서비스경험 유무의 경우 서비스의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서비스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부양책임주체'로 국가를 선택할 odds ratio가 4.56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적연금수급여부의 경우에도 공적연금수급을 하는 경우가 수급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국가를 선택할 odds ratio가 1.472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가치태도 요인인 부모부양책임의 경우 부모부양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가를 선택할 odds ratio가 1.606배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분야의 정부지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출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덜 지출해야 한다는 사람보다 국가를 선택할 odds ratio가 1.65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변수인 연령과 교육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국가를 선택할 odds ratio가 각 .823배와 .844배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비스 경험이 있을수록,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부모부양책임이 자식에게 전적으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인분야 정부지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보다는 국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노인부양책임주체'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B	S.B.	Wald	유의수준	Exp(B)
서비스경험 (무) 유	1,518	.183	69,104	.000	4,562
공적연금수급(무) 유	.387	.161	5,767	.016	1,472
부모부양책임	.474	.062	57,960	.000	1,606
정부지출_노인	.506	.075	45,743	.000	1,659
성별 (여) 남	-.101	.124	.673	.412	.903
연령	-.195	.049	15,875	.000	.823
교육수준	-.170	.051	11,149	.001	.844
경상소득	.000	.000	1,035	.309	1,000
상수	.010	.497	.000	.984	1,010
χ^2	242,155(.000)				
-2LL	1970,065				
Cox&Snell R ²	.090				
Nagel R ²	.156				

종속변수는 0: 가족선택 집단, 1: 국가선택 집단임
 ()*은 기준집단(reference group)임.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부양책임주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을 확인하고, 개별변인의 상대적 효과를 승산비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부양책임주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첫째, 복지서비스를 경험할수록, 공적연금을 수급할수록 국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복지서비스 및 연금수급경험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국가와 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의 역할강화는 가족의 기능약화를 가속화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수요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재정부담 증가요인이 되어 급속한 고령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14][15]. 복지서비스 정부의 재정부담은 다시 사회와 가족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그것은 노인의 삶의 질 저하로 연결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⁶

둘째, 주요변수들의 결과가 노인부양책임주체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노인분야지출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할수록,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서비스 및 연금 수급경험이 국가 책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노인분야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의 미성숙함을 확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었다.

또한 노인부양부담에 대한 연구가 모두 일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부양책임주체에 대해 국가의 기대가 전반적으로 낮으나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부양책임주체가 가족으로부터 사회 및 국가로 옮겨가고 있는 인식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기존 연구들에서[8][11] 노인부양책임주체에 대해 국가책임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국가책임에 대한 강조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연금성숙과 함께 인식도 급변화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복지서비스 및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여[16][17] 다른 조사 자료를 통한 분석을 통하여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고령화는 이미 맞닥뜨리고 있는 커다란 난제이다. 앞으로는 지금과는 다른 고령 도래하고 있으며, 경제상황도 가족관계도, 생활방식도 많은 것들을 바꿀 커다란 변화이다.

그 중 노인부양문제는 거시적인 사회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가치관 및 인식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어야 한다[19]. 또한 개인, 가족, 혹은 국가의 어느 한 주체가 온전히 노후의 경제적 부양책임을 질수도 없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선진국의 역사가 말해준다[8].

국가가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가족만의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면 개인 스스로의 준비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좀 더 촘촘한 노인복지시스템을 위한 국가의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유엔 경제사회국(DES), 2012 세계인구전망 보고서.
- [2] 정화철, “치매노인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1호, pp.167-182, 2017.
- [3] 손병일, 정민숙,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193-203, 2013.
- [4] 김상윤, 김한곤, “부모자식간 부양교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678-694, 2016.
- [5] 송다영,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지원정책 방향성,” 사회복지정책, 제19권, 제8호, pp.207-233, 2004.
- [6] 김정석, “한국 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한국노년학, 제25권, 제4호, pp.1-11, 2005.
- [7] 김영범, 박준식, 이기원, “자녀와의 지원교환과 노인의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8권, pp.47-65, 2008.

6 최근 국가재정약화와 인구고령화로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역할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책임과 개인책임간의 균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다[18].

- [8] 석재은, “세대별 노후부양관 차이와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1호, pp.163-191, 2009.
- [9] 통계청, 2017 고령자통계.
- [10] 홍경준, “잠재집단분석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2호, pp.95-121, 2010.
- [11] 김사현,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정책, 제19집, 제1호, pp.9-38, 2012.
- [12] E. Papadakis, “Public opinion, public polic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Studies, Vol.15, pp.21-37, 1992.
- [13] P. Pierson,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Vol.48, No.2, pp.143-179, 1996.
- [14] 김희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 정책연구시리즈 2014-02, 한국개발연구원, 2014.
- [15] 김희삼,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KDI FOCUS, 제52호, 2015.
- [16] 류진석,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4호, pp.79-101, 2004.
- [17] 김영순, 여유진, 한국인의 복지태도: 탈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77-306, 2007.
- [18] M. Rein and J. Turner, “Work, Family, State and Market: Income Packaging for Older Household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52, pp.93-106, 1999.
- [19] N. Hooyman and N. Gontea, “feminist perspective on family care : policies for gender justice,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95.

저 자 소 개

박 찬 희(Chan-Hui Park)

정회원



- 2004년 2월 : 강남대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6년 8월 : 강남대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강남대부설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 前 :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외래교수
 - 前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팀장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장기요양, 치매, 복지행정